

# 코로나19 대응 전 행정력 집중

###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다중이용시설 폐쇄 등 선제적 대응 나서

진안군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시킴에 따라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진안지역에는 아직 코로나19 확진이나 의심환자는 없지만 대구, 경북 등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확산됨에 따라 진안군도 법정부적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이미 지난달 31일부터 나혜수 군수 권한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상황총괄반, 상황관리반, 주민대응반, 언론대응반 등 4개반을 편성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 상태다. 현재는 심각단계 격상으로 9개 협업부서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합류하여 총 13개 협업부서가 본격 가동 되고 있다.

아울러, 국민체육센터, 문예체육관, 복합노인복지타운,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읍면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잠정적으로 폐쇄 또는 휴관, 휴원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코로나19 예방과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군청 구내식당을 주 1회 휴무에서 주 2회로 늘려



진안군은 매주 월요일 나혜수 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코로나 대응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지역 식당을 이용하게 했으며, 진안시장 이용과 지역물품구매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군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매주 월요일 나혜수 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코로나 대응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24일 코로나19 예방관련 추진상황 보

고회에서 나혜수 군수 권한대행은 "일상 업무에서 코로나19 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줄 것"과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보건소 협조 요청 시 우선적 지원과 함께 종합행정담당 읍면에서도 실과소장이 직접 출장하여 방역과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이 올해 영양관리사업 발굴과 추진에 지역주민의 건강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3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무주군, 지역주민 건강행태 설문조사 실시

### 영양관리사업 발굴·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7개 항목 조사

무주군이 올해 영양관리사업 발굴과 추진에 지역주민의 건강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3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역주민 건강행태에 따른 맞춤형 영양관리사업 발굴과 기존 사업운영에 대한 환류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영양관리사업 운영에 따른 의견과 △보건기관 이용 경험, △가구조사, △식습관 등 기초사항 및 건강행태에 대한 총 7개 항목이다.

대상은 보건의료원 내원 주민을 비롯해 방문사업 대상자, 각종 프로그램 및 교육, 상담자 등으로, 설문조사 결과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무주군 보건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영양관리 사업을 비롯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만예방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 방문건강관리 등) 등의 발전방향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2021년 문체 분야 국가예산 확보 총력

### 장영수 장수군수, 문체부 박양우 장관 만나 사업 필요성 적극 건의

장영수 장수군수가 문체 분야 2021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24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 박양우 장관을 만나 2021년도에 확보해야 할 문체 분야 3개 사업(137억원)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

특히 장수군은 문화예술교육 적용시설 공모사업 1차에 선정된 장안문화예술촌 꿈꾸는 예술터 조성사업의 적극적인 당위성을 설명 하는 등 2021년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영수 군수는 "지난해 사상 첫 국가 예산 1,000억원 시대를 여는 성과를 거뒀으나 여전히 경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한다"며 "신사업 발굴과 국가예산 확보에 균형 역량을 결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예산은 4월 말까지 지자체별 중앙부처에 신청하고 5월 말까지 중앙부처별 기획재정부 예산안 제출, 9월 2일까지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 등의 일정을 거쳐 12월 2일까지 국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조심기간 인화물질 제거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일~5월 15일) 동안 산림연접 및 인근지역에 대하여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추진해 산불발생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무주국유림관리소 관할 5개 시·군(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남원시, 임실군)에 대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4명을 인화물질 제거

반으로 편성·운영하여 지역별 순찰을 통해 산불위험이 높은 곳부터 차례대로 제거사업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범 정부차원의 대책에 따라 소각에 의한 인화물질 제거는 전면 금지하고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은 파쇄기로 파쇄하고 폐비닐 등 농산폐기물은 수거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군, 구내식당 휴무 주 2회 확대 운영

진안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청 구내식당 휴무일을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 공무원, 공무원 노조와 협의하여 구내식당 휴무일을 매주 금요일 주 1회에서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로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군청 직원 300여 명이 인근 식당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예방물품을 지원했으며 주민 대상 해외 여행객을 조사하여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혜수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주민 고통을 분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시행

진안군은 유해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인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기준 2년 이상 진안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나 건설기계로 PM·NOx 부착 1대, 경유자동차 매년 저감장치 부착 90대, 건설기계 매년 저감장치 부착 10대 등 총 1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는 별도의 기간 없이 예산 소진 시까지다. 신청방법은 차량소유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에 연락하여 사업조건 부합여부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하면 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되며 환경개선부담금도 3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저감장치 보증기간은 3년이며 2년간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보조금이 회수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수도검침원 근무복 착용·명찰패용

### 근무 특성 감안한 활동복으로 업무효율 향상·신분확인 가능해 주민 불안감 해소

무주군은 수도검침원(13명)들의 근무복 착용과 명찰패용을 통해 사명감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높여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검침원들에게 방한복에 이어 춘추복과 하절기복도 지급할 예정이며 근무 특성을 감안한 활동복으로 업무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무주군 수도검침원들은 "가정을 방

문하면 아무래도 낯선 사람이다 보니 경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불편한 부분들이 다소 있었는데 근무복 착용과 명찰패용 이후 훨씬 부드러워졌다"라며 "근무자 입장에서 보면 일하기 편해서도 좋지만 주민들을 응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친절을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 입을 모았다.

무주군청 맑은 물 사업소 수도시설

사업팀 박은석 팀장은 "검침을 가장한 범죄에 대한 주민 불안을 씻고 근무자들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업무를 진행해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제도 시행

### 도민 실질적 권익 보호 위해 사회·경제적 약자 대상

진안군은 24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 개정(2018.11.1.)에 따라 국선대리인(변호사) 예정자를 위촉하는데 따른 것이다.

행정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제도는

대리인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고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민의 실질적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

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그 밖에 위원이 경제적으로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이다.

행정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지원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피청구인(시·군) 또는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적정여부를 검토 후 선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번호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